

살맛 나는 내 고향 만들기와 <지방의제 21>

박 영 숙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

1997년 4월 6일은 21세기를 1000일 앞두고 있는 날로서 이 날을 전후하여 구미의 기독교 국가들에서는 다양한 축하행사를 전개하고 있는가 하면 세계야생동식물보호기금(WWF) 등의 환경운동단체들은 21세기의 지구환경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어서 2000년대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희비를 엇갈리게 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20세기가 경제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는 것이다. 지구시민들은 제각각 자기 지역을 살맛 나는 고향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작업은 현세대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누리고자 하는데서 출발되지만 미래세대에게도 현세대인이 누린 만큼의 생태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일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 만들기인 것이다.

세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작업을 <지방의제 21> 수립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제 21>은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우리 나라의 국무총리(당시 정권식 총리)를 비롯한 100여개 국가 정상들의 합의에 의해 채택된 21세기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행동계획인 <의제 21-Agenda 21>에 의거한 국가 및 지역마다의 <의제 21>이다. <의제 21>은 4부 40장 115항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지구시민 개개인과 그들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방정부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제 21>은 그 계획의 수립부터 실현하는 전 과정이 필히 지방정부, 지역사회 기업 그리고 민간단체(교육기관, 경제기구, 종교기구, 주민조직 등)와 주민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간의 원만한 협력관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살맛 나는 내 고향 만들기의 청사진인 <지방의제 21>을 만들기 위해서는 ①지역사회의 환경과 자원(인적·물적)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고 ②쾌적한 환경을 위한 지표와 각 주체의 실천지표(단계적) 등의 환경비전이 설정되어야 하며 ③구체적인 행동계획이 마련됨으로 문서로서만이 아닌 주체자간의 지구보전을 위한 실천 약정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제 21>의 수립과 실행은 지역사회의 쾌적한 환경을 지역주민과 지방정부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으로 환경자치를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6.27 사대지방자치제선거 이후 출범한 지방자치제=시민자치제는 <지방의제 21> 수용의 기반이 되어주고 있다.

<지방의제 21>은 1996년 현재 세계 49개국의 1천 500 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서울을 포함한 5개 광역시를 비롯한 1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 중에 있다(이창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7년). 최근 이 작업에 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6월 5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5차 국제세계환경의날 행사를 기해 완성하여 유엔발전위원회에 제출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발

전위원회에 제출된 <지방의제 21>은 그 실천성과를 해마다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유의해야 한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이다. 그리고 지역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요구는 점진적으로 높아지게 되어있다. 삶의 질은 종래의 물량적인 것이 아닌 쾌적한 환경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의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다. 환경공동체건설계획안인 <지방의제 21>의 수립과 실행과정이 바로 이들의 성취를 전인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삶의 질의 조건인 쾌적한 환경은 지구시민 모두가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하는데서 비롯된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이란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생활양식으로서 에너지, 물, 자원 등의 사용을 억제하며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폐기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행동양식이다. 환경친화적인 행동양식에는 불편이 따르게 마련이며 때로는 재정의 추가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혼자 하기보다는 직장 혹은 주거지역 단위의 소집단활동으로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3~5 가족 또는 팀 단위로 전개하고 있는 에코가족(팀)운동(UNEP가 지원하는 운동)이 그러한 문제점을 고려한 운동이다. 자원을 아끼기 위한 활동으로서는 <다아나바운동(다시쓰고,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는 운동)>을 들 수 있는데 각급 학교 교정의 알뜰시장이나 여성단체들의 벼룩시장 또는 기초자치단체들의 재활용센터의 운영 등이 여기에 속한다. 외국에서는 일시적인 바자회 형식으로 전개하는 우리와는 달리 이미 하나의 상권을 이룰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다. 이들은 자원봉사자에 의해 자선사업의 기금모금 활동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더욱 크게 얻어내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장서야 한다. 우선해야 하는 일은 지역주민에게 환경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실시하며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주민단체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여 관주도가 아닌 민주도로 하게 한다. 주민단체들의 이러한 활동전개를 위해 동사무소를 개방하여 활동거점으로 활용하게 하고 정부기구에 주민위원회를 두어 환경행정에의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해 낸다.

최근 수입규제조치라는 반발을 사고 있는 과소비추방운동이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릴 뿐만 아니라 지구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정착을 위한 운동으로 전개될 때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노력이 되는 동시에 수입규제라는 통상국들의 저항에도 정부가 당당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있어 권장해야 한다.

(사)그린웨이퍼운동연합이야말로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통해 살맛 나는 내 고향 만들기 와 지구환경을 살리는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다고 믿어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한다.

살맛 나는 내 고향 만들기와 <지방의제 21>

박 영 숙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

1997년 4월 6일은 21세기를 1000일 앞두고 있는 날로서 이 날을 전후하여 구미의 기독교 국가들에서는 다양한 축하행사를 전개하고 있는가 하면 세계야생동식물보호기금(WWF) 등의 환경운동단체들은 21세기의 지구환경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어서 2000년대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희비를 엇갈리게 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20세기가 경제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는 것이다. 지구시민들은 제각각 자기 지역을 살맛 나는 고향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작업은 현세대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데서 출발되지만 미래세대에게도 현세대인이 누린 만큼의 생태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일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 만들기인 것이다.

세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작업을 <지방의제 21> 수립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제 21>은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우리 나라의 국무총리(당시 정영식 총리)를 비롯한 100여개 국가 정상들의 합의에 의해 채택된 21세기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행동계획인 <의제 21-Agenda 21>에 의거한 국가 및 지역마다의 <의제 21>이다. <의제 21>은 4부 40장 115항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지구시민 개개인과 그들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방정부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제 21>은 그 계획의 수립부터 실현하는 전 과정이 필히 지방정부, 지역사회 기업 그리고 민간단체(교육기관, 경제기구, 종교기구, 주민조직 등)와 주민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간의 원만한 협력관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살맛 나는 내 고향 만들기의 청사진인 <지방의제 21>을 만들기 위해서는 ①지역사회의 환경과 자원(인적·물적)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고 ②쾌적한 환경을 위한 지표와 각 주체의 실천지표(단계적) 등의 환경비전이 설정되어야 하며 ③구체적인 행동계획이 마련됨으로 문서로서만이 아닌 주체자간의 지구보전을 위한 실천 약정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제 21>의 수립과 실행은 지역사회의 쾌적한 환경을 지역주민과 지방정부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으로 환경자치를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6.27 사대지방자치제선거 이후 출범한 지방자치제=시민자치제는 <지방의제 21> 수용의 기반이 되어주고 있다.

<지방의제 21>은 1996년 현재 세계 49개국의 1천 500 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서울을 포함한 5개 광역시를 비롯한 1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 중에 있다(이창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7). 최근 이 작업에 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6월 5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5차 국제세계환경의날 행사를 기해 완성하여 유엔발전위원회에 제출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발전

위원회에 제출된 <지방의제 21>은 그 실천성과를 해마다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유의해야 한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이다. 그리고 지역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요구는 점진적으로 높아지게 되어있다. 삶의 질은 종래의 물량적인 것이 아닌 쾌적한 환경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의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다. 환경공동체건설계획안인 <지방의제 21>의 수립과 실행과정이 바로 이들의 성취를 견인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삶의 질의 조건인 쾌적한 환경은 지구시민 모두가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하는데서 비롯된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이란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생활양식으로서 에너지, 물, 자원 등의 사용을 억제하며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폐기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다. 환경친화적인 행동양식에는 불편이 따르게 마련이며 때로는 재정의 추가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혼자 하기보다는 직장 혹은 주거지역 단위의 소집단활동으로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3~5 가족 또는 팀 단위로 전개하고 있는 에코가족(팀)운동(UNEP가 지원하는 운동)이 그러한 문제점을 고려한 운동이다. 자원을 아끼기 위한 활동으로서는 <다아나바운동(다시쓰고,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는 운동)>을 들 수 있는데 각급 학교 교정의 알뜰시장이나 여성단체들의 벼룩시장 또는 기초자치단체들의 재활용센터의 운영 등이 여기에 속한다. 외국에서는 일시적인 바자회 형식으로 전개하는 우리와는 달리 이미 하나의 상권을 이룰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다. 이들은 자원봉사자에 의해 자선사업의 기금모금 활동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더욱 크게 얻어내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장서야 한다. 우선해야 하는 일은 지역주민에게 환경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실시하며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주민단체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여 관주도가 아닌 민주도로 하게 한다. 주민단체들의 이러한 활동전개를 위해 동사무소를 개방하여 활동거점으로 활용하게 하고 정부기구에 주민위원회를 두어 환경행정에의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해 낸다.

최근 수입규제조치라는 반발을 사고 있는 과소비추방운동이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 나라의 경제를 살릴 뿐만 아니라 지구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정착을 위한 운동으로 전개될 때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노력이 되는 동시에 수입규제라는 통상국들의 저항에도 정부가 당당히 대응할 수 있어 권장해야 한다.

(사) 그린웨밀리운동연합이야말로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통해 살맛 나는 내 고향 만들기 와 지구환경을 살리는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다고 믿어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한다.

살맛나는 내고장 만들기

지 방 의 제 21

1997년 4월 6일은 21세기를 1000일 앞두고 있는 날로서 이 날을 전후하여 구미의 기독교 국가들에서는 다양한 축하 행사를 전개하고 있는가 하면 세계야생동식물 보호기금(WWF) 등의 환경운동단체들은 21세기의 지구 환경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어서 2000년대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희비를 엇갈리게 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20세기가 경제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는 것이다. 지구시민들은 제각각 자기 지역을 살맛 나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작업은 현세대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지만 미래세대에게도 현세대인이 누린 만큼의 생태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일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 만들기인 것이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

세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작업을 『지방의제 21』수립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제 21』은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우리 나라의 국무총리(당시 정원식 총리)를 비롯한 100여개 국가 정상들의 합의에 의해 채택된 21세기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행동계획인 『의제 21-Agenda 21』에 의거한 국가 및 지역마다의 '의제 21'이다. '의제 21'은 4부 40장 115항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지구시민 개개인과 그들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방정부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제 21』은 그 계획의 수립부터 실현하는 전 과정이 팔히 지방정부, 지역사회, 기업 그리고 민간단체(교육기관, 경제기구, 종교기구, 주민조직 등)와 주민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간의 원만한 협력관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박영숙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

살맛나는 내고장 만들기의 청사진인 『지방의제 21』을 만들기 위해서는 ①지역 사회의 환경과 자원(인적 물적)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고 ②쾌적한 환경을 위한 지표와 각 주체의 실천지표(단계적) 등의 환경비전이 설정되어야 하며 ③구체적인 행동계획이 마련됨으로 문서로서만이 아닌 주체자간의 지구보전을 위한 실천 약

정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제 21』의 수립과 실행은 지역사회의 쾌적한 환경을 지역주민과 지방정부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으로 환경자치를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6·27 4대지방자치제 선거 이후 출범한 지방자치제=시민자치제는 『지방의제 21』수용의 기반이 되어주고 있다.

『지방의제 21』은 1996년 현재 세계 49개국의 1천 50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서울을 포함한 5개 광역시를 비롯 1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 중에 있다(이창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7). 최근 이 작업에 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6월 5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5차 국제세계환경의 날 행사를 기해 완성하여 유엔발전위원회에 제출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발전위원회에 제출된 『지방의제 21』은 그 실천성과를 해마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실천 성과 해마다 제출해야

21세기는 환경의 세기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요구는 점진적으로 높아지게 되어 있다. 삶의 질은 종래의 물량적인 것이 아닌 쾌적한 환경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의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다. 환경공동체 건설 계획안인 『지방의제 21』의 수립과 실행과정이 바로 이들의 성취를 견인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삶의 질의 조건인 쾌적한 환경은 지구시민 모두가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하는 데서 비롯된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이란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생활 양식으로서 에너지, 물, 자원 등의 사용을 억제하며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폐기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다. 환경친화적인 행동 양식에는 불편이 따르게 마련이며 때로는 재정의 추가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혼자 하기보다는 직장 혹은 주거지역 단위의 소집단 활동으로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3~5 가족 또는 팀 단위로 전개하고 있는 에코가족(팀)운동(UNEP가 지원하는 운동)이 그러한 문제점을 고려한 운동이다. 자원을 아끼기 위한 활동으로서 '다아나바운동(다시쓰고,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는 운동)'을 들 수 있는데 각급 학교 교정의 앞뜰시장이나 여성단체들의 벼룩시장 또는 기초자치단체들의 재활용센터의 운영 등이 여기에 속한다. 외국에서는, 일시적인 바자회 형식으로 전개하는 우리와는 달리, 이미 하나의 상권을 이룰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다. 이들은 자원봉사자에 의해 자선사업의 기금 모금 활동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더욱 크게 얻어내고 있다.

에코가족운동 확산하자

이러한 운동은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장서야 한다. 우선해야 하는 일은 지역주민에게 환경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실시하며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주민단체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여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하게 한다. 주민단체들의 이러한 활동 전개를 위해 동사무소를 개방하여 활동거점으로 활용하게 하고 정부 기구에 주민위원회를 두어 환경행정에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해 낸다.

최근 수입규제 조치라는 반발을 사고 있는 과소비추방운동이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또한 이 운동이 지구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 정착을 위한 운동으로 전개될 때,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노력이 되는 동시에, 수입규제라는 통상국들의 저항에도 정부가 당당히 대응할 수 있게 권장해야 한다. ●